

2020년도

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
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
(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)

2021. 4.

대한민국정부

- 목 차 -

(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: 57건)

1. 실질적 갈등과제 해결을 위해 분기별 추진현황 점검, 내실 있는 갈등협의회 운영 및 실무협의회 구성, 갈등과제 전담인력 확충 등 조치를 취할 것 1
2. 보틀리눅의 관리체계 관련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나 관련 부처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므로 관리 상황을 특별 점검하고, 산업통상자원부에 관련 사실 확인 및 조사를 지시할 것 2
3. 병역특례제도를 도입한 배경, 국위선양 활동을 통해 대체할 수 있는 선의의 목적, 시대적 변화와 형평성을 고려해 추가 편입을 검토할 것 3
4. 123개 기초자치단체가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이격거리 규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정성적인 규제도 시행하는 경우가 다수 있는 바, 관련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할 것 4
5. 자동차 결함과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국무조정실 차원에서 합동조사 TF 구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5
6. 국무총리실 소속 64개 위원회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 필요하다면 위원회 수를 축소·재정비하거나 해당 행정부처로 이관하고 전문성 있는 인사로 구성할 것 6
7. DTC 유전자 분석에 관한 건이 산업부 규제샌드박스를 통과했음에도 후속 부처 합동심사가 지연되고 있어 점검 필요 7
8. 국방부 부패 신고자에 대한 사생활 침해 행위에 대해 국무조정실 차원의 신고자 보호 조치 대책을 마련할 것 8

9.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촉에 있어 정치적, 연령 및 지역균등을 고려할 것 ... 9
10. 초광역권 형태의 중앙부처와 지방정부가 협력하는 광역청의 설립을 검토할 것 ... 10
11. 우리나라 위기관리 대응 조직을 권위적인 대응보다 전문가에 의한 대응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할 것 11
12. 법적 근거가 없이 운영되고 있는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의 관계 법령을 마련할 것 12
13. 공공기관 지방 이전 대상으로 국책은행이 포함되는 경우 금융기관의 업무 관련성을 고려할 것 13
14. 사전컨설팅 등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성화 및 적극행정 평가 강화 필요 14
15. 청년들이 직접 느낄 수 있는 청년정책에 대한 고민과 정책을 마련할 것 ... 15
16. 미세먼지특별위원회의 전체위원회 개최가 미비한데, 민간위원 전체회의에 차관, 실장 등이 모여 주기적으로 의견을 교환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 .. 16
17. 현행 국정과제에 관한 평가에서는 정부 자체 평가만 있을 뿐 정책수혜자인 시민의견을 볼 기회가 없음. 평가 과정에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민 참여 평가 제도화를 검토할 것 17
18. 160조원에 달하는 한국판 뉴딜 사업 예산은 사업목적이 불분명하고, 그 효과를 담보하기도 어려워 보이므로 국무총리실에서 철저히 관리할 것 18
19. 일률적인 국비 지원으로 인해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.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 19

20.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특행기관과 중앙행정기관간의 업무연계 및 전문성 강화, 재정지원 필요 등 대책을 마련할 것 20
21. 일몰규제는 시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없어져야 되고 존속이 예외인데, 일몰규제 심사결과를 보면 대부분이 현상유지임. 규제개혁위원회 역할이 쉽지는 않겠지만 개선해야 할 것은 개선할 것 21
22. 주요 규제혁신 과제 목록을 보면 규제가 폐지되거나 완화된 경우가 대부분인데, 실제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규제들은 강화도 필요함. 강화시킬 규제, 현 상태로 유지할 규제, 없앨 규제를 구분·재편할 것 22
23. 규제샌드박스의 실행에 있어 과도한 부가조건이 또 다른 규제가 되어 본 사업의 발목을 잡는 일이 없도록 관계부처와 부가조건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것 23
24. 집중관리 갈등과제의 해결이 미진한데 ‘공공갈등 조정원’ 설립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기까지의 입법공백을 메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.. 24
25. 대주주 산정 기준 완화 문제는 증권시장의 가장 큰 이슈로,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지 않도록 소관 부처와 협의하여 조속히 결정할 것 25
26. 코로나19 소상공인 대출 67만건 중 23만건이 꺾기에 해당하며, 이는 정책 자금 지원을 은행이 실적 쌓기에 악용하는 것임. 금융당국과 협의하여 은행의 신뢰를 저버리는 영업 관행을 개선할 것 26
27.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기업들이 활발한 해외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귀국 후 자가격리 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특별 조치를 마련할 것 27
28.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고통을 임차인-임대인간 해결이 아니라, 국가와 은행이 함께 책임지는 방식으로 검토할 것 28

29. 코로나19 관련 비과학적 사회적 거리두기로 국민들의 피로감과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누적되고 있으므로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개선할 것 29
30. 부동산신탁사를 활용한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을 검토할 것 30
31. 탈원전이 국가 정책 기조가 된 상황에서 원자력진흥계획을 수립은 쉽지 않음.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성급한 탈원전 추진의 문제도 검토할 것 31
32. 미군기지의 반환과 관련하여 국내법상 효력이 있는 SOFA 합의의사록과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를 바탕으로 미군 측에 해당 기지의 오염 치유를 적극적으로 요구할 것 32
33. 간호 인력의 부족 및 열악한 처우 개선을 위해 간호인력 개편 전반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 33
34. 노인 교통사고 사망 비율에 비해 노인보호지역의 CCTV 설치는 2%로 미비한 실정임. 노인보호구역 내 교통 CCTV를 확충할 것 34
35. 아동학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체계를 철저히 구축하고 책임을 명확히 할 것 35
36.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방침에 대하여 범정부차원에서 점검 및 대응책을 강구하고, IAEA나 미국·중국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마련 할 것 36
37.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하여 해류와 방류 양에 대해 정확히 분석하여 대응할 것 37
38. 대리운전·청소·배달업·퀵서비스 등 플랫폼 노동자들을 위한 사회보험 정책을 마련할 것 38

- 39. 역학조사관의 근무 조건 및 처우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39
- 40. 만 12세 이하 아동의 무료 백신 공급 체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40
- 41. 전국민 코로나 전수조사를 위한 래피드(Rapid) 공법의 도입을 검토할 것 41
- 42. 민간·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 42
- 43. ODA의 유상·무상 이원화 및 분절화에 따른 관리 감독 부실이 우려됨.
내실 있는 국제개발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ODA 집행체계 일원화를
검토할 것 43
- 44. 자살예방을 위해 방송 및 인터넷·SNS 등 자살묘사 표현 자율규제를 강화하고,
각 지역의 상황에 따른 솔루션 마련할 것 44
- 45. 지역경제 회복과 공동체 기능의 회복, 지역 주민 참여라는 다양한 순기능이
있는 지방정부의 공공 배달앱을 지원하고 관리할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그
결과를 보고할 것 45
- 46. 도로 포트홀 발생에 따른 조치방법과 관련, 기초자치단체가 먼저 초동
조치하고 사후에 해당 관리청이 정산하는 방안 등 국민의 안전을 위해
신속히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할 것 49
- 47. 아동학대 업무는 공공적인 관리가 요구됨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에게
공적인 권한을 부여하거나 해당 업무를 공공시설로 전환하는 등 아동
학대 업무의 공공성 확보 방안에 관해 검토할 것 47
- 48. 독감백신 접종 후 사망자와 관련 중앙조사반을 구성을 통해 철저한 역학
조사를 실시할 것 48

49. 게임 산업의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 허위 확률정보 제공 및 확률정보 조작 처벌 규정 마련 등 개선대책을 관계부처와 논의할 49
50. 질산암모늄 등 위험물질이 항만구역 내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법령정비를 포함한 제도개선을 검토할 것 50
51. 자살 예방 분야는 자살예방정책위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, 전담조직, 예산 및 인력 확충 등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노력할 필요 51
52. 고용유지지원금을 유럽 수준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, 여러 형태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있도록 검토할 필요 52
53. 국세청·관세청의 점검 등 중국산 마스크 문제에 대응하는 등 마스크 시장 안정을 위해 부처 간 협업 대책을 세울 것 53
54. 국민들이 국정과제별 보고서 및 이행상황 정보를 수시로 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54
55. 국세청·관세청 등 과세관청 소속 직원을 조세심판원으로 파견 받는 것은 부적절하므로, 조세심판 청구자인 납세자의 권익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도록 조세심판원의 기능을 바로 잡을 것 55
56. 조세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의 원만한 사후관리를 위해 과세관청의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, 심판원의 사건처리 지연이 지속되는 문제에 대한 원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선방안을 마련·보고 할 것 56
57. 조세심판관의 출신이 기재부에 편중되어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조세심판관 자격요건과 인선 절차에 대해 종합적인 제도 개선책을 마련할 것 57

(경제 · 인문사회연구회 및 23개 정부출연연구기관 : 40건)

1. 한국직업능력개발원, 한국형사정책연구원, 한국환경정책·평가연구원 등 연구기관 명칭 변경과 관련분야 연구범위 확대 및 연구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출연연법 개정 등을 지원할 것 61
2. 국무조정실에서 실시한 채용감사 결과의 불공정 채용 사례를 참고하여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할 것 62
3. 신규 채용 시, 학사급만 적용되고 있는 지역인재 채용 가점을 석·박사급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부처 등과 협의하여 대안을 마련할 것 63
4. 국책연구기관의 정보보안 강화를 위해 정보보안 전담 인력 충원방안을 마련할 것 64
5. 연구회 NKIS 이용자 불편을 개선할 것 65
6. 장애인 의무고용률 및 장애인 생산품 의무구매 비율을 준수할 것 66
7. 학·석사급 연구직이 박사학위를 취득해도 박사급 연구직으로의 승진이 차단되는 투트랙 제도를 개선할 것 67
8. 계약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수의계약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68
9. 초과근무수당 문제와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문제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 69
10. 국책연구기관의 이직률이 높은 데, 이직방지 및 우수 연구인력 확보를 위해 정년연장, 처우개선 등 사기진작 방안을 마련할 것 70
11. 저임금 기관의 경우 직급체계 개선 등을 통한 처우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· 71

12. 정규직 전환 이후 비정규직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72
13. 세종국책연구단지 시설, 안전문제 등 관리 부실사항을 개선할 것 73
14. 부적정 대외활동에 대한 기관별로 상이한 제재기준을 개선하고 가중처벌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할 것 74
15. 과학기술계 연구기관에 적용되고 있는 자체청사 보유기관의 재산세 면제혜택을 경제인문사회계 연구기관에도 적용되도록 관련법 개정을 지원할 것 75
16. 채용부정행위,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, 연구보고서 표절 및 중복게재 등 연구 부정행위, 미신고 대외활동, 성희롱 사건, 가족수당 부정수급 등 국책연구기관의 도덕성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76
17.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지역화폐 연구 논란 관련, 연구기관과 연구자를 보호할 수 있는 연구독립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77
18. 과도한 민간수탁사업 수행 방지를 위한 기준을 마련할 것 78
19. 기본연구 수행 시, 특정 연구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관리할 것 79
20. 연구기관 간 연구과제가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하고, 다분야 학제적 협동연구 과제 발굴을 제도화하는 것을 검토할 것 80
21. 각 기관에서 진행 중인 위험물질·유해화학물질 관련 연구를 통합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협동연구를 기획할 것 81
22. 연구회 NKIS 홍보 강화방안을 마련할 것 82
23. 국책연구기관 스마트워크센터(여의도, 강남)의 복무관리를 강화할 것 83

24. 출연연 공통 교육프로그램 마련시 연구기관의 자체 프로그램과 중복되지 않도록 할 것 84
25. 특정 연구자들의 경우 소속 출연연의 기본연구 수행 과제수는 매우 낮은 반면, 대외활동으로 과도하게 수입을 창출하고 있으므로 이를 방지할 방안을 마련할 것 85
26. KDI 등이 공적마스크 판매 기간에 연구개발적립금으로 마스크를 대량 구입 하였는데 정부의 시책에 반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할 것 86
27. 부동산 가격 급상승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 대처방안 및 세제 틀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므로,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 · 87
28. 직원 관련 수사 중인 형사사건에 대하여 구속수사가 안 되고 있으므로, 수개월간 휴가를 사용하고 월급을 받은 직원을 고발하거나 사건이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조치할 것 88
29. 과도한 행사 개최경비 집행 관행을 시정할 것 89
30. 임시 사택 운영 종료에 대비하여 장기적인 정주 여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90
31. 통일의식조사 설문 문항 ‘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(헌법 제4조)은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하여 포함하고, ‘우리 나라 주변국 중 어느 나라가 좋은가?’ 문항에 대해 질문의도와 구체성을 고려하여 개선할 것 91
32. 국토교통부 의뢰 시, 장래 철도환경 수요를 반영하여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-C노선 인덕원 정차모델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할 것 92
33. 수능 원서접수부터 결제방식까지 디지털화가 가능하도록 검토할 것 93

- 34. 수능 응시수수료 면제자에 대한 홍보 강화와 절차를 개선할 것 94
- 35. 육아휴직의 권리로서 안정적 보장과 소득대체율 수준 현실화를 위한 '공적 부모 보험' 도입 방안에 대한 연구추진을 검토할 것 95
- 36. 보건의료 인력확충을 위한 의(醫)-한(韓) 통합 연구추진을 검토할 것 96
- 37. 「지역화폐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」 보고서 관련해서 제기된 문제점을 검토하여 보고서 내용을 보완하고, 연구자 보호 및 연구 자율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 97
- 38.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상 방출계획에 대응하여 수산업 보호를 위한 연구를 검토할 것 98
- 39. 수사심의위원회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할 것 99
- 40. 채용 과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채용규칙을 개정할 것 · 100

(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)

2020년도 국정감사결과
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국무조정실	1. 실질적 갈등과제 해결을 위해 분기별 추진상황 점검, 내실 있는 갈등 협의회 운영 및 실무협의회 구성, 갈등과제 전담인력 확충 등 조치를 취할 것	<p>《시정처리결과》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과제별 추진상황 점검(매월), 갈등관리정책협의회 운영(반기별), 개별현안 관련 실무 회의(수시) 등을 통해 주기적 과제 점검·관리 중 <p>《향후추진계획》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향후 갈등관리기본법 제정 등 상황 변화를 고려하여, 갈등관리 전담인력 확충 검토

2020년도 국정감사결과
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국무조정실	2. 보툴리눔의 관리체계 관련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나 관련 부처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므로 관리 상황을 특별 점검하고, 산업통상자원부에 관련 사실 확인 및 조사를 지시할 것	<p>《시정처리결과》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보툴리눔 관리는 입법취지에 따라 약사법(식약처), 감염병예방법(질병관리청), 생화학무기금지법, 산업기술보호법, 대외무역법(이하, 산업부), 가축전염병예방법(농식품부) 등으로 관리 중 - 산업부, 보툴리눔 독소 관련 대응 제약·메디톡스 방문·조사('21.2월~), 산업부-질병청 간 보툴리눔균 관련 정기 및 수시검사 협의('21.4월) <p>《향후추진계획》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보툴리눔균 등 생물작용제등의 보안 관리 강화를 위한 산업부 고시('21년 상반기) * 생물작용제(생화학무기금지법) 등의 보안관리 책임자 및 보안관리 전담 인력 지정, 취급자에 대한 취급제한 절차, 보안교육 실시 의무, 보안관리 의무 부과 등 ○ 보툴리눔균 등 제조·보유기관에 대한 정기(수시)검사 실시 : '21년 4월~10월

2020년도 국정감사결과
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국무조정실	3. 병역특례제도를 도입한 배경, 국위선양 활동을 통해 대체할 수 있는 선의의 목적, 시대적 변화와 형평성을 고려해 추가 편입을 검토할 것	<p>《시정·처리결과》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대중문화예술분야 우수자에 대해 최대 만 30세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병역법 개정* 완료('20.12.22) * 병역법 제60조 제2항의 입영연기 가능 대상에 “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서, 국가 위상·품격 제고에 크게 기여했다고 문체부 장관이 추천한 자” 추가 * 병역자원 부족에 따라 병역특례 축소 기조·형평성 문제 등 감안, 특례 추가 편입은 未고려. 사회적 여론과 공감대 형성 과정을 지켜볼 필요 <p>《향후 추진계획》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개정 병역법의 충실한 이행(병무청) 및 관련 여론 등 지속 모니터링

2020년도 국정감사결과
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국무조정실	4. 23개 기초자치단체가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이격거리 규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정성적인 규제도 시행하는 경우가 다수 있는 바, 관련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할 것	<p>《시정처리결과》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태양광 발전 이격거리 규제 개선 방안 도출을 위해 관계부처에서 연구용역 진행 중(산업부, '21.2~10월) <p>《향후추진계획》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관계부처의 제도 개선방안 추진 현황 점검 및 관계부처 회의 개최

2020년도 국정감사결과
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국무조정실	5. 자동차 결함과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국무조정실 차원에서 합동조사 TF 구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	<p>《시정처리결과》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자동차 결함 조사 시 전문성을 갖고 있는 국토부를 중심으로 관계기관 간 협업 강화 등을 위해 「자동차 관리법」 개정·시행 中('21.2~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고 조사 시 현장 출입, 사고차량 보전 등 관련, 관계기관(경찰·소방·국토부)간 긴밀한 협업체계 구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3 개정('21.2.5 시행) ○ 그 외 자동차결함 정보시스템 부처(국토(안전)-환경부(배출가스)) 연계 등 결함조사 체계 구축·강화 <p>《향후추진계획》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·운영 상황 등 개정법에 따른 제도 운영 상황 점검 및 개선사항 지속 발굴·검토

2020년도 국정감사결과
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국무조정실	6. 국무총리실 소속 64개 위원회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 필요하다면 위원회 수를 축소·재정비하거나 해당 행정부처로 이관하고 전문성 있는 인사로 구성할 것	<p>《시정처리결과》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정비 대상 선정) 14개 위원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선정 기준) ①실적 저조, ②他 위원회와 기능 중복, ③부처 전문성 필요 - (선정 제외) ①과거사위 및 국정과제 관련 위원회, ②향후 개최 수요 예상 위원회, ③'20년 신설 위원회 ○ (정비 결과) 소속 위원회 총 63개 ('21.1.1 기준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정비 6개) 국민안전안심위, 보육정책조정위, 김해신공항검증위, 노후거점경쟁력강화위, 문화다양성위, 접경지역정책위 - (신설 5개)* 포항지진진상조사위, 포항지진피해구제위, 수소경제위, 청년정책조정위, 동계올림픽특구위 <p>* 신설 5개 위원회는 의원 입법안 근거</p> <p>《향후추진계획》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'21년도 위원회 정비 방안 마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旣 정비 대상 위원회 등 정비 지속 추진

2020년도 국정감사결과
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국무조정실	7. DTC 유전자 분석에 관한 건이 산업부 규제샌드박스를 통과했음에도 후속 부처 합동심사가 지연되고 있어 점검 필요	<p>《시정처리결과》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조실, 관계부처와 실무 점검 회의, 국조실장 주재 회의 등을 개최하여 부처·업체가 협의를 통해 IRB심의를 신속히 추진할 것을 독려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실무 점검회의('20.7.27), 국조실장 주재 신산업 규제혁신 릴레이 토론(4차로 회의)('20.11.17, 11.30) ○ 산업부·복지부는 컨설팅을 제공하고 IRB 내에 유전자검사 특별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는 등 신속한 심의 지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업체-복지부-산업부-공용IRB 사무국 공동면담('20.12.1), 상시 컨설팅 지원, 공용PB 사무국 내 신속 검토 ○ 3개 업체 IRB 승인, 1개 업체 IRB 심의 재신청 예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테라젠이텍스('19.12.30), 메디젠휴먼케어('20.12.30), 마크로젠('21.3.25) IRB 승인 <p>《향후추진계획》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산업부·복지부는 신속히 IRB 심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 ○ 국조실은 IRB심의 현황을 모니터링하며 필요시 적극 지원

2020년도 국정감사결과
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국무조정실	8. 국방부 부패 신고자에 대한 사생활 침해 행위에 대해 국무조정실 차원의 신고자 보호 조치 대책을 마련할 것	<p>《시정처리결과》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 조치 강화를 위해 「공익신고자보호법」을 개정('21.3.24) <p>※ 개정 내용(법 제14조제2항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공익신고자 등의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는 공익신고 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관계 법령 등에 따라 공익신고자 등에게 징계나 불리한 행정 처분을 하는 경우 그 징계나 불리한 행정 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. <p>《향후추진계획》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공익신고자의 신분 노출을 방지하고 소속기관의 불이익 조치로부터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「공익신고자보호법」 개정안 등 입법 지원

2020년도 국정감사결과
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국무조정실	9.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촉에 있어 정치적, 연령 및 지역 균등을 고려할 것	<p>《시정처리결과》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1기 민간위원 위촉시('20.9.18) 활동분야, 연령, 성별, 지역 등 종합 고려함 <p>《향후추진계획》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2기 민간위원 위촉시('22.9.18) 위원님 요구사항을 세심히 반영하겠음

2020년도 국정감사결과
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국무조정실	10. 초광역권 형태의 중앙 부처와 지방정부가 협력하는 광역청의 설립을 검토할 것	<p>《시정처리결과》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광역청과 유사한 형태의 권역별 지방국토관리청, 지방조달청 등 특별지방행정기관*을 전국에 설치·운영 중 * 총 24개 부처, 5142개 기관 - 지자체 요청시 지역 여건을 반영해 적절한 중앙·지방 협력 노력 등 지원 예정

2020년도 국정감사결과
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국무조정실	11. 우리나라 위기관리 대응 조직을 권위적인 대응보다 전문기에 의한 대응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할 것	<p>《시정처리결과》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전문적인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해 전문가 협의체 구성·운영 중 ○ 생활방역위원회 운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목적)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논의 등 코로나19 생활방역 정책 논의 - (구성) 복지부 장관·민간전문가 공동 위원장, 의약계 및 인문사회학계 전문가 등 21인 구성 - (임기) '20.4.8~'21.4.7(1년) - (회의횟수) 총 31회 실시 * (기간) '20.4.10(1차) ~ '21.4.7(31차) ○ 코로나19 대응전략 자문위원회 운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목적) 방역·의료 분야에 대한 코로나19 대응전략 논의 - (구성) 중수본 총괄책임관·민간전문가 공동 위원장, 중수본·방대본, 방역·의료 전문가 등 25인 구성 - (운영) 월2회 정례적으로 운영, 필요시 수시 운영 * '20.11.24 1차 회의 후, 총 10회 개최 <p>《향후추진계획》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생활방역위원회 2기 구성 및 운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2기 구성) 소상공인 대표 2인 추가하여 2기 위원 위촉 추진 * (임기) '21.4.8 ~ '22.4.7 (1년) - (회의운영) 격주 개최 원칙이나,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수시개최 ○ 코로나19 대응전략 자문위원회 지속 운영

2020년도 국정감사결과
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국무조정실	12. 법적 근거가 없이 운영되고 있는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의 관계 법령을 마련할 것	<p>《시정처리결과》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관련 진행상황 등* 서면 보고 ('20.10.19, 박용진 의원실) * (서면보고) 구미 불산사고('12.9월) 이후 화학사고 예방, 대비, 대응 및 복구를 위해 7개 지역에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설치·운영중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평상시에는 관계 부처별(환경부·소방청·고용부·산업부 등) 소관 법률에 따라 사업장 안전관리 및 사고 예방활동 수행 - 사고 발생시에는 합동 대응하되 소방에서 사고현장 지휘 등 컨트롤 타워 역할을 담당 <p>《향후추진계획》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운영위원회(환경부 간사) 개최시(분기 1회),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의 기능 강화방안(법적근거 등) 논의 * 운영위원회 논의 결과에 따라 관련 법령 개정 등 추진 예정

2020년도 국정감사결과
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국무조정실	13. 공공기관 지방 이전 대상으로 국책은행이 포함되는 경우 금융기관의 업무 관련성을 고려할 것	<p>《향후추진계획》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추진되는 경우, 지역발전 정도 등 형평성 원칙과 지역여건, 각 기관 업무 관련성 등 효율성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계획임

2020년도 국정감사결과
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국무조정실	14. 사전컨설팅 등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성화 및 적극행정 평가 강화 필요	<p>《시정처리결과》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성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관별 감사부서의 장을 적극행정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, 지자체 적극행정위원회 징계요구 면제효력을 정부합동 감사까지 확대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고 면책제도(사전컨설팅 및 적극촉 자문) 이용 지속 독려 ○ 적극행정 평가제도 개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정부업무평가 적극행정 부문 배점을 2배로 확대*하고, 적극행정 체감도 배점 확대 및 평가단에 경제단체 추천인사 등 현장 전문가를 포함 추진 <p>* 1.6점 → 적극행정 부분 가점 3점</p> <p>《향후추진계획》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부처 등의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용을 적극 장려하고, 연말에 강화된 평가제도 실시

2020년도 국정감사결과
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국무조정실	15. 청년들이 직접 느낄 수 있는 청년정책에 대한 고민과 정책을 마련할 것	<p>《시정처리결과》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체감도 높은 정책 추진 위해, 청년정책조정위 민간위원 등 청년 및 전문가 주도로 『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('21-'25)』 수립('20.12.23) <p>《향후추진계획》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'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이행 상황에 대한 반기별 점검 및 관리 ○ 온-오프라인 청년 소통 및 홍보 강화

2020년도 국정감사결과
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국무조정실	16. 미세먼지특별위원회의 전체위원회 개최가 미비한데, 민간위원 전체 회의에 차관, 실장 등이 모여 주기적으로 의견을 교환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	<p>《시정처리결과》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처리중) 미세먼지특별위원회 전체위원회를 개최*하여 미세먼지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 중 * (개최) : '20.11.2일, (참석) 총리, 16개 부처 장·차관 및 민간위원 - 다만 전체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어 민간위원 전체 회의를 개최해 주요 사항을 논의 중 <p>《향후추진계획》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향후 민간위원 전체 회의에 관계 부처 고위공무원단 이상이 참석하여 논의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할 계획

2020년도 국정감사결과
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국무조정실	17. 현행 국정과제에 관한 평가에서는 정부 자체 평가만 있을 뿐 정책 수혜자인 시민의견을 볼 기회가 없음. 평가 과정에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민 참여 평가 제도화를 검토할 것	<p>《시정처리결과》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정부업무평가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평가단 운영 중 ('20년 100명) ○ 또한, 매년 약 17,000여명의 일반국민과 정책수요자를 대상으로 국정과제에 대한 국민만족도를 조사하여 평가에 반영 중 ○ 2021년도 정부업무평가 계획 수립시 반영('21.2월) <p>《향후추진계획》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평가계획에 맞춰 국민만족도 조사 및 정부업무평가 실시

2020년도 국정감사결과
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국무조정실	18. 160조원에 달하는 한국판 뉴딜 사업 예산은 사업 목적이 불분명하고, 그 효과를 담보하기도 어려워 보이므로 국무총리실에서 철저히 관리할 것	<p>《시정처리결과》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강력한 추진력 확보를 위한 추진체계 기 구축·운영중 - 한국판뉴딜 전략회의(대통령), 당정 추진본부(경제부총리·민주당 정책위의장), 관계장관회의(경제부총리) 등 운영중 - 한국판뉴딜 실무를 뒷받침하기 위한 실무지원단을 기재부에 설치·운영중 <p>《향후추진계획》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한국판뉴딜 실무지원단(기재부) 중심으로 관련부처간 유기적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지속 점검·관리 예정

2020년도 국정감사결과
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국무조정실	19. 일률적인 국비 지원으로 인해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에 따라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.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	<p>《시정처리결과》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자체별 재정자주도 등에 따라 보조율을 10~20% 가감하는 ‘차등 보조율’ 제도 既시행중 * 보조금법 제10조에 근거 <p>《향후추진계획》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'22년 예산 편성시에도 기재부와 협의하여 지역균형뉴딜 등 지역 주도 국가균형발전에 집중투자 추진 * '22년 예산안 편성지침에 반영하여 각 부처 통보(기재부, 3.30)

2020년도 국정감사결과
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국무조정실	20.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특행기관과 중앙행정기관간의 업무연계 및 전문성 강화, 재정지원 필요 등 대책을 마련할 것	<p>《향후추진계획》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제주자치도의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해 특행기관 사무에 필요한 행정·재정적 지원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음 * 7차 제도개선('21.3, 지원위원회)을 통해 고용부 장관의 권한인 고용장려금 사업을 도지사에게 이양하는 근거 마련 (광주고용센터 → 제주고용센터로 사무이양)

2020년도 국정감사결과
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국무조정실	21. 일몰규제는 시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없어져야 되고 존속이 예외인데, 일몰규제 심사결과를 보면 대부분이 현상유지임. 규제개혁위원회 역할이 쉽지는 않겠지만 개선해야 할 것은 개선할 것	<p>《시정처리결과》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'20년 일몰도래 규제 126건 정비 (규개위 심의, '20.10.23) * ('20.5~6월) 부처 자체검토 → (6~7월) 규개위원·분야별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분야별 검토 → (8~10월) 규개위·규제실 검토 * (대표사례) 시설경비업 인력요건 완화 (경비원 20명 이상 → 10명 이상) 등 <p>《향후추진계획》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'21년 일몰도래 규제 정비계획 규개위 보고(~'21.5월)

2020년도 국정감사결과
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국무조정실	22. 주요 규제 혁신 과제 목록을 보면 규제가 폐지되거나 완화된 경우가 대부분인데, 실제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규제들은 강화도 필요함. 강화시킬 규제, 현 상태로 유지할 규제, 없앨 규제를 구분·재편할 것	<p>《시정처리결과》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생명·안전·환경 규제는 폐지·완화시에도 심사 추진중 - '20.7월 정부입법으로 행정규제 기본법 개정안 발의 - '21.2월 정무위 법안소위 심의 ○ '20년 일몰도래 규제 심사를 통해 실효성이 낮은 규제 126건 정비 <p>《향후추진계획》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입법 노력 지속 ○ 규제일몰제 재검토기한 설정기준 검토(행정연) 및 제도정비 추진 ('21년 하반기)

2020년도 국정감사결과
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국무조정실	23. 규제샌드박스의 실행에 있어 과도한 부가조건이 또 다른 규제가 되어 본 사업의 발목을 잡는 일이 없도록 관계부처와 부가조건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것	<p>《시정처리결과》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규제특례심의위 운영부처와의 지속 협의를 통해 사업이 과도하게 제한 받지 않도록 조건 부여를 최소화 하고 있음 - 실증 진행중에도 부가조건을 탄력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사업자가 ‘부가조건 완화를 요청하는 제도’를 운영중 <p>《향후추진계획》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각 부처 심의위 승인과제 부가조건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, 조건 부여 최소화를 위해 운영부처와 지속 협의해 나갈 예정

2020년도 국정감사결과
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국무조정실	24. 집중관리 갈등과제의 해결이 미진한데 ‘공공갈등 조정원’ 설립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기까지의 입법공백을 메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	<p>《시정처리결과》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조정원 설립 여부와는 별개로, 갈등해결을 위한 지원 강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현안점검회의, 관계부처회의 등을 통해 과제 추진상황 수시 점검 및 해결 방안 모색 - 갈등관리 연구기관 역할을 지속 확대하여 전문가 컨설팅 강화, 갈등관리 DB 운영 등 실질적인 지원 확대 <p>《향후추진계획》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갈등현안에 대한 △체계적 점검·관리 △적극적 조정 지원 △대안 컨설팅 등 갈등해결 지원 지속

2020년도 국정감사결과
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국무조정실	25. 대주주 산정 기준 완화 문제는 증권시장의 가장 큰 이슈로,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지 않도록 소관 부처와 협의하여 조속히 결정할 것	<p>《시정처리결과》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대주주 산정 기준 현행(10억원) 유지 결정('20.11.3. 기재위) <p>《향후추진계획》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'23년 금융투자소득세(주식 양도차익 전면 과세) 도입시 대주주 요건 폐지 예정

2020년도 국정감사결과
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국무조정실	26. 코로나19 소상공인 대출 67만건 중 23만건이 꺾기에 해당하며, 이는 정책자금 지원을 은행이 실적 쌓기에 악용하는 것임. 금융당국과 협의하여 은행의 신뢰를 저버리는 영업관행 개선할 것	<p>《시정처리결과》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원칙적으로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가입 강요하는 것은 불공정 영업행위로 금지 중 - 기존 취약차주의 경우 차주 의사와 무관히 금융상품 판매 제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①대출실행 전후 1개월 내, ②대출금액 1% 초과상품 - 기존 일반차주는 보장성 금융상품에 대해서 1% 초과금지 등 판매제한 ○ 금소법 제정을 통하여 불공정 영업행위를 금소법으로 이관하고 불공정 영업행위 대상·범위 확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피성년·피한정후견인 차주도 취약차주와 동일한 판매 제한 적용 - 일반차주 판매제한 확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대출 전·후 1개월 내 투자성 금융상품(펀드 금전신탁 등) 판매 제한(1% 초과금지) 추가 <p>《향후추진계획》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차주의 의사에 반하는 대출상품 계약 관련 불공정영업행위에 대한 감시·감독 강화

2020년도 국정감사결과
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국무조정실	27.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기업들이 활발한 해외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귀국 후 자가격리 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특별 조치를 마련할 것	<p>《시정처리결과》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업인이 계약·투자 등 중요사업상 목적으로 입국시 관련부처 심사를 거쳐 격리면제 실시중(‘20.4월~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특히, 방역상 위험도가 낮은 교류확대가능국가*에 단기방문(14일 이내)시에도 입국시 격리면제 실시(‘20.7월~) * ‘21.4.6일 현재, 사우디아라비아, 중국, 태국, 베트남, 호주, 뉴질랜드, 캄보디아, 대만 등 ○ 중요경제활동을 위해 국외단기방문(3개월 이내)자 중 불가피성, 역학적 위험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 백신 우선접종 실시 추진 * 접수(‘21.3.17~) → 관련부처심사 → 접종(‘21.3월~) <p>《향후추진계획》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격리기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감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(입법예고 중) * (기존) 자가 및 시설격리의 기간을 ‘최대 잠복기가 끝나는 날까지’로 규정 → (변경) ‘최대잠복기 내에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날까지’

2020년도 국정감사결과
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국무조정실	28.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고통을 임차인-임대인간 해결이 아니라, 국가와 은행이 함께 책임지는 방식으로 검토할 것	<p>《시정처리결과》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코로나19로 크게 타격을 받은 집합제한업종 임차인의 임차료 부담 경감을 위해 특별대출 신설('20.12월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시중은행을 통해 최대 1천만원, 2~3% 금리, 낮은 보증료*로 지원 * 1년차 면제, 2~5년차는 0.6%(기존 소상공인 금융지원 보증료 0.9%) ※ 3.31일 기준 4,304억원 집행(14.3%) ○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 대상 쏠금융권 만기연장·이자상환 유예 조치도 연장하여 시행중 (~'21.9월말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차주의 상환부담이 일시에 몰리지 않도록 상환유예 대출 연착륙 지원 ○ 소상공인의 임차료를 인하한 임대인을 지원하는 '착한 임대인 세액공제' 제도 운영중('20.3월~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제도 확산을 위해 적용기간을 '21년까지 연장하였으며 세액 공제율을 임대료 인하액의 50%에서 70%로 상향('21.3월) <p>《향후추진계획》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집합제한업종 임차인 특별대출 잔액의 신속한 집행 추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필요시 프로그램 보완 검토 ○ 만기연장·상환유예 및 연착륙 방안 지속 추진

2020년도 국정감사결과
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국무조정실	29. 코로나19 관련 비과학적 사회적 거리두기로 국민들의 피로감과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누적되고 있으므로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개선할 것	<p>《시정처리결과》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코로나19 장기화 대비 지속가능한 거리두기 체계 마련·시행(‘20.11.7) - 확진자 수를 최소 수준으로 감소시키는 방역전략에서 ‘합리적으로 관리 가능한 위험’ 수준에서의 안정적 억제로 방향 전환 <p>《향후추진계획》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자영업자·소상공인 피해 감안, ‘자율과 책임’을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거리두기 체계 개편 추진 중

2020년도 국정감사결과
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국무조정실	30. 부동산신탁사를 활용한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을 검토할 것	<p>《시정처리결과》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관계부처(국토부) 검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신탁사 참여 시 장점(사업관리, 자금조달 강화 등)이 있으나, 다만, 위탁수수료 발생, 조합→신탁사로 사업 이관 등에 대해 이견도 존재 <p>《향후추진계획》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관련업계, 관계기관 등의 의견수렴

2020년도 국정감사결과
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국무조정실	31. 탈원전이 국가 정책 기조가 된 상황에서 원자력진흥계획 수립은 쉽지 않음.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성급한 탈원전 추진의 문제도 검토할 것	<p>《시정처리결과》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과기정통부는 원자력 분야 산학연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‘제6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(’22-’26)’ 수립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, 이를 원자력진흥위에 보고(’20.12.28) - 에너지전환, 안전·환경 가치 증대 등 변화에 대응한 원자력 이용의 새로운 방향 제시 <p>《향후추진계획》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과기정통부는 공청회 등 전문가 및 일반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사회적 합의 가능한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(~’21.12)

2020년도 국정감사결과
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국무조정실	32. 미군기지의 반환과 관련하여 국내 법상 효력이 있는 SOFA 합의의사록과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를 바탕으로 미군 측에 해당 기지의 오염 치유를 적극적으로 요구할 것	<p>《시정처리결과》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책임 강화 등을 위해 상호 수용 가능한 방안을 미측과 적극 협의 - '19년 4개 기지에 이어, '20년 12개 기지반환 조건으로 미군기지 환경문제를 지속 논의*키로 한·미간 합의 <p>* ①오염정화책임, ②사용 중 기지 환경관리 강화, ③SOFA 관련문서 개정</p> <p>《향후추진계획》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SOFA 환경분과위 등을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미측과 협의 추진

2020년도 국정감사결과
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국무조정실	33. 간호 인력의 부족 및 열악한 처우 개선을 위해 간호인력 개편 전반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	<p>《시정처리결과》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'18.3월, 간호인력 확충 및 처우 개선을 위해 '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'을 발표하여 차질없이 추진 중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인력확충) 간호대학 입학정원 증원을 통한 신규간호사 배출 확대,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사업 등을 통한 재직간호사 이직 방지,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를 통한 유휴간호사 재취업 연계 등 종합 대책 추진 - (근무환경) 3교대 등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시간제, 야간전담간호사 건강보험 수가 기준 합리화, 야간근무 관련 수가 신설 ○ 코로나19를 계기로 '20.12월, '간호사 확충 및 근무여건 개선' 내용 포함, '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' 발표 <p>《향후추진계획》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'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' 중 간호 대책 차질없이 추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공중보건장학간호사제도, 지역 간호사제, 다양한 근무형태 시범 적용, 임상수련과정 도입, 전문 간호사제도 업무범위 마련 등

2020년도 국정감사결과
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국무조정실	34. 노인 교통사고 사망 비율에 비해 노인보호 지역의 CCTV 설치는 2%로 미비한 실정임. 노인보호구역 내 교통 CCTV를 확충할 것	<p>《시정처리결과》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노인보호구역 중장기 개선계획 마련('20.12월) ○ 고령자 사고 다발지역 현장점검 및 시설 개선*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47개 지역 261건 시설 정비('20.12월) ○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국비 지원 확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'19년 20억→'20년 60억→'21년 70억 ○ 지방도 마을주민 보호구간 5개년 계획 수립 및 확산 추진('21~) ○ 고령자 사고 다발지역 대상 점검 및 시설개선 위한 특교세 지원 협의('21.3~) <p>《향후추진계획》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노인보호구역 지정확대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추진 ○ 국도변 마을주민 보호구간 확대*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3년간('21~'23) 180개 과속단속카메라 등 설치

2020년도 국정감사결과
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국무조정실	35. 아동학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체계를 철저히 구축하고 책임을 명확히 할 것	<p>《시정처리결과》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아동학대 현장에서 아동학대전담 공무원·아동보호전문기관·경찰의 적극적 조치를 위해 공동업무수행 지침을 개정·시행함('21.4.2) ○ 시도 점검회의(복지부 1차관 주재)를 통해 현장상황 및 애로사항 청취 등 즉각분리 시행('21.3.30일)에 대비 <p>《향후추진계획》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중앙-지자체 협력을 통해 아동보호 시설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 확충 <p>* ('21년도) 아동학대쉼터 105개(+29)/전담공무원 664명(+374) 총원</p>

2020년도 국정감사결과
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국무조정실	36.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방침에 대하여 범정부차원에서 점검 및 대응책을 강구하고, IAEA나 미국·중국 등 국제 사회와의 공조를 마련할 것	<p>《시정처리결과》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(9개) 합동 TF를 구성·운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총 21차례 관계부처 회의 개최 ○ 양자·다자 회의에서 국제사회 관심 환기 및 우리 입장 설명, 국제 공동대응 중 <p>《향후추진계획》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민 건강·안전을 최우선으로 관계부처 TF 중심 범정부 대응 계속 ○ 오염수 처분 결정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IAEA 국제조사단에 우리측 전문가 참여 추진

2020년도 국정감사결과
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국무조정실	37.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하여 해류와 방류 양에 대해 정확히 분석하여 대응할 것	<p>《시정처리결과》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오염수 해양 방출이 국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예측·분석하기 위한 해양확산 모델 개발·고도화 추진중 <p>《향후추진계획》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해양확산 시뮬레이션 모델 개선 연구·개발 추진(~'22)

2020년도 국정감사결과
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국무조정실	38. 대리운전·청소·배달업·퀵서비스 등 플랫폼노동자들을 위한 사회보험 정책을 마련할 것	<p>《시정처리결과》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플랫폼종사자 보호대책 마련·발표('20.12월, 관계부처 합동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플랫폼종사자 보호입법 제정, 고용·산재보험 확대표준계약서 도입·확산 ○ 산재·고용보험을 플랫폼종사자를 포함한 다양한 고용형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불가피한 경우*에만 특고 산재보험 적용제외를 허용하도록 법 개정('20.12월 국회통과, '21.7.1 시행 예정) - 고용보험 적용대상 단계적 확대 *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('20.12), 특고 적용 고용보험료·보험료징수법 국회 통과('20.12) <p>《향후추진계획》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*(‘20.12월) 차질없이 추진 * 예술인(‘20.12), 특수형태근로종사자(‘21.7), 플랫폼종사자(‘22.1), 기타 특고 및 플랫폼 직종(‘22.7), 자영업자(~'25)

2020년도 국정감사결과
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국무조정실	39. 역학조사관의 근무 조건 및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	<p>《시정처리결과》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근무기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일반직) 인사혁신처 주관 민간 경력자 채용을 통하여 정년 보장되는 공무원으로 총원 - (임기제) 최대 10년까지 근무가 가능하며, 임기만료 후 재채용을 통하여 지속근무 가능 ○ 보수지급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일반직) 일반직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급여 지급 - (임기제) 연봉상하한액 범위에서 지급하고 있으며, 의사 면허 소지자 역학조사관의 경우 월 평균 11,700천원 지급 <p>* (연봉범위) 가급 : 61,684천원~상한액없음, 나급 : 51,098~76,686천원, 다급 : 44,514~62,675천원</p> <p>《향후추진계획》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정년이 보장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도 지속적 총원 실시 ○ 또한, 의사면허 소지자의 경우 민간병원 보수 수준에 준하여 보수 지급 추진

2020년도 국정감사결과
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국무조정실	40. 만 12세 이하 아동의 무료 백신공급체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	<p>《시정처리결과》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인플루엔자 백신 공급체계를 중앙조달 방식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관계부처(조달청 등) 및 의료계와 검토중 <p>《향후추진계획》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관계부처(조달청 등) 및 의료계 협의 후 금년(2021-22절기) 인플루엔자 백신 공급체계 개선 계획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백신 수급 및 유통 안정화, 국가 배분기능 강화를 위해 정부주도 ‘총량구매-사전현물공급’ 방식으로 일원화 검토 ※ 유통 전문성 강화를 위해 ‘제조(수입)사 직접계약, 물품구매 특수조건 보완강화 추진

2020년도 국정감사결과
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국무조정실	41. 전국민 코로나 전수조사를 위한 래피드(Rapid) 공법의 도입을 검토할 것	<p>《시정처리결과》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래피드(Rapid) 공법의 신속항원검사 제품이 정식허가*됨에 따라, 임시 선별검사소, 감염취약시설 주기적 선제검사 등에 사용 중 ('20.11.11.~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일반의료기관*에서도 사용 가능 * ('20.12.14.)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 및 응급실 또는 중환자실 입원 환자 대상 급여 적용 中 ○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사용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및 배포 완료 ('20.11.17.)

2020년도 국정감사결과
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국무조정실	42. 민간·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	<p>《시정처리결과》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 데이터 정책 추진을 위해 4차위를 총리·민간 공동위원장 체제의 민관 데이터 컨트롤타워로 출범('21.2.) ○ 총리 주재 첫 회의('21.2.)에서 마이데이터 제도 활성화 등을 포함한 '국가 데이터 119프로젝트'를 수립·추진 중 ○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(마이꾸러미) 개시('21.2.24.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6개 관계기관 8개 서비스 제공 * ①건강기록 ②은행신용대출 ③신용카드 신청 ④개인채무조정 ⑤소상공인자금신청 ⑥주택청약자격 확인 ⑦경기 일자리정책 신청 ⑧경기 면접정장 대여 신청 <p>《향후추진계획》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분야별 마이데이터 제도발전과 서비스 확산을 위한 '(가칭)마이데이터 발전 종합정책'을 수립 예정(4차위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등 마이데이터 법적 근거 마련, 핵심분야별 마이데이터 실증사업추진 등 ○ 10여종 서비스 추가 개시(~10월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119안심콜, 국가유공자 취업지원, 제주도 민원서식 간소화 등

2020년도 국정감사결과
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국무조정실	43. ODA의 유상·무상 이원화 및 분절화에 따른 관리 감독 부실이 우려됨. 내실있는 국제개발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ODA 집행체계 일원화를 검토할 것	<p>《시정처리결과》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유상·무상 ODA의 통합적·효율적 추진을 위해 국제개발협력추진기획·조정기능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「국제개발협력기본법」 전부개정('20.11.27 시행) ○ 개정법에 따라 국제개발협력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ODA 전반을 통합·관리할 수 있도록 위원회 사무기구(국제개발협력본부) 확대·설치('21.2.25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략수립-사업심사-점검·평가 등 ODA 전반에 대해 유·무상 통합기구에 준하는 역할을 수행 <p>《향후추진계획》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ODA 업무체계 전반을 혁신함으로써 바탕으로 ODA 이원화·분절화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고 가시적 성과제고 추진

2020년도 국정감사결과
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국무조정실	44. 자살예방을 위해 방송 및 인터넷·SNS 등 자살묘사 표현 자율규제를 강화하고, 각 지역의 상황에 따른 솔루션 마련할 것	<p>《시정처리결과》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‘13~’17년 자살사망자 전수조사 완료 및 시군구별 분석보고서 발간(‘20.11~12월) → 지자체별 맞춤형 관리 추진 지원 ○ 포털·SNS 업체와 온라인 자살유발 정보 확산방지를 위한 민관협력 회의 통해 자율규제 강화(‘21.1) <p>※ 기자, 경찰 등 대상 “자살보도 권고 기준 3.0” 개정 및 교육 강화(‘18년~)</p>

2020년도 국정감사결과
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국무조정실	45. 지역경제 회복과 공동체 기능의 회복, 지역 주민 참여라는 다양한 순기능이 있는 지방정부의 공공 배달앱을 지원하고 관리할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할 것	<p>《시정처리결과》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배달앱 관련 소상공인 부담완화 노력 - 플랫폼과 입점업체의 상생협력과 권리 구제를 핵심으로 하는 상생협력법 개정안 발의('21.2, 이수진의원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(주요내용) 상생협의회, 분쟁조정, 정당한 사유없는 수수료 인상 금지 - 상생협업체 운영 등 플랫폼사와 소상공인 협약 체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중기부-배달의민족 상생협약 체결('21.1.18) ○ 지자체 공공 배달앱에서 지역사랑 상품권의 사용이 편리하도록 지침 수립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'21년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(행안부, '21.1월) <p>《향후추진계획》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배달앱 관련 소상공인 부담완화 노력 - 여당·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차질없는 상생법 개정('21.상) - 소상공인 협·단체와 플랫폼사간 지속적 상생협력 모색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소상공인-배달플랫폼 간 협업과제 발굴 및 해소 노력 지속

2020년도 국정감사결과
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국무조정실	46. 도로 포트홀 발생에 따른 조치방법과 관련, 기초자치단체가 먼저 초동 조치하고 사후에 해당 관리청이 정산하는 방안 등 국민의 안전을 위해 신속히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할 것	<p>《시정처리결과》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도로법에 따라 도로 위계별로 유지보수 주체 구분 ○ 「도로파임(포트홀) 관리체계 개선방안*」(‘20.7)에 따라 지역별, 시기별(장마철) 탄력적으로 전문업체 활용 등 신속 보수 유도 <p>* 포트홀 규격, 사전보수체계 도입, 긴급 보수매뉴얼 마련, 추적관리시스템 등 8개 과제</p> <p>《향후추진계획》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디지털 관리체계* 구축(’21.上) 등 포트홀 신속보수 시스템 구축 지속 추진 <p>* 포트홀 관리지도 구축, AI자동탐지 장비 도입 등</p>

2020년도 국정감사결과
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국무조정실	47. 아동학대 업무는 공공적인 관리가 요구되므로 아동보호전문기관에게 공적인 권한을 부여하거나 해당 업무를 공공시설로 전환하는 등 아동학대 업무의 공공성 확보 방안에 관해 검토할 것	<p>《시정처리결과》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‘아동학대 조사 공공화’ 시행(’20.10.~)으로 학대 조사 관련 업무를 지자체로 이관하여 공공성 확보 ○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전담공무원의 아동학대 현장조사시 조사참여, 사례관리 등 아동학대처벌법 상 공적업무 권한 부여 <p>《향후추진계획》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전담공무원 지자체 배치를 조속 추진하여 아동학대 조사 업무의 공공화를 신속히 추진 ○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관련 전문성을 활용한 공동업무 수행 확대

2020년도 국정감사결과
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국무조정실	48. 독감백신 접종 후 사망자와 관련 중앙조사반을 구성을 통해 철저한 역학조사를 실시할 것	<p>《시정처리결과》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관련 법령*에 따라 질병관리청 중앙역학조사반 구성 완료, 예방접종 후 사망 등 중증 이상반응 발생시 신속대응체계 구축 운영 - 이상반응의 인과성 판단을 위한 역학조사 및 후속조치 실시 <p>*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15조</p> <p>《향후추진계획》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역학조사 철저 및 역학조사 방법·내용 등에 대한 역학조사관·지자체 담당자 교육 지속 추진 <p>*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역학조사관 기본 교육 및 지속교육에 포함</p>

2020년도 국정감사결과
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국무조정실	49. 게임 산업의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 허위 확률정보 제공 및 확률정보 조작처벌 규정 마련 등 개선대책을 관계부처와 논의할 것	<p>《시정처리결과》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확률형 아이템 관련 관계부처 점검 회의 개최('20.11.24, 국조실-문체부-공정위) - 확률형 아이템 확률정보 공개 관련 게임산업법 개정계획(문체부) 및 거짓확률정보 관련 시장모니터링 현황·계획(공정위) 논의 ○ 확률형 아이템 확률정보 제공의무 및 거짓표시 처벌 등을 규정한 게임산업법 개정안 발의* <p>* 이상헌('20.12)</p> <p>《향후추진계획》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 국회입법 논의과정 지원(문체부) ○ 공정위 소비자법집행 감시요원 중점감시분야로 확률형 아이템 선정,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모니터링('21.下) - 확률형 아이템 확률정보 거짓표시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적발 시 자진시정 조치 또는 사건처리

2020년도 국정감사결과
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국무조정실	50. 질산암모늄 등 위험물질이 항만구역 내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법령정비를 포함한 제도개선을 검토할 것	<p>《시정처리결과》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항만구역 내 위험물질의 통합적 관리 강화를 위해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추진 중('20.10.22, 의원발의) - 유해화학물질 불법 반입 등으로 인한 국민 안전상의 위해 방지를 위해, 화학물질 통관정보의 부처간 공유 추진 ※ 참고, 항만내 유해화학물질 저장소 안전관리 규정을 마련·운영 중이며 (환경부, '17.6월 ~) - 국내 질산암모늄 관리현황 관계부처 합동점검도 실시('20.8.10~8.28)

2020년도 국정감사결과
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국무조정실	51. 자살 예방 분야는 자살 예방정책위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, 전담조직, 예산 및 인력 확충 등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노력할 필요	<p>《시정처리결과》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의 상정 안건 사전 심의 기구로서 자살예방정책실무위원회를 구성·운영중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제1차 실무위원회('20.11.19.) - 제2차 실무위원회('21.4.19.) → 국무조정실(국민생명지키기 추진단)에서 실무위원회 운영을 지원 ○ 자살예방 전담조직 '한국생명 존중희망재단' 출범('21.4)

2020년도 국정감사결과
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국무조정실	52. 고용유지지원금을 유럽 수준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, 여러 형태인 지원 프로그램을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있도록 검토할 필요	<p>《시정처리결과》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특별고용지원업종*, 집합금지·제한업종**, 경영위기업종***에 대해 90% 한시적 상향지원중 * 조선업 포함 15개업종(~'21.3.31.) ** 식당, 숙박업 등 24개업종('21.6.30.) *** 10개분야 112개업종('21.4.1.~'21.6.30) <p>《향후추진계획》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코로나 및 기업 상황을 긴밀히 모니터링하여 기업부담이 커질 경우, 지원수준 상향(최대 90%) 기간 연장 등 검토 ○ 고용유지지원금*과 소상공인 금융 지원·정책자금 등 타 제도는 제도 도입 취지·수혜대상 등이 달라 통합관리 체계 마련은 신중검토 *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 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지원금 지급 (휴직·휴업수당의 50~67%)

2020년도 국정감사결과
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국무조정실	53. 국세청·관세청의 점검 등 중국산 마스크 문제에 대응하는 등 마스크 시장 안정을 위해 부처 간 협업 대책을 세울 것	<p>《시정처리결과》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마스크 업계 지원 방안 마련·추진 (’20.11.3, 식약처 등 관계부처 합동) - △ 불법수입마스크 단속 △ 국내외 판매 지원 △ 제품개발 지원 등 <p>《향후추진계획》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수출 지원 등 마스크 시장안정화 방안 지속 추진

2020년도 국정감사결과
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국무조정실	54. 국민들이 국정과제별 보고서 및 이행상황 정보를 수시로 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	<p>《시정처리결과》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정과제 과제별 보고서 및 분기별 추진현황을 정부업무평가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<p>* '21.3.9 현재 '19, '20년도 국정과제 과제별 보고서 및 '20.4분기까지의 추진현황(누적) 자료 열람 가능</p> <p>《향후추진계획》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성과자료집 발간 등 국정과제 성과 및 이행상황 공개 노력 지속

2020년도 국정감사결과
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국무조정실	55. 국세청·관세청 등 과세관청 소속 직원을 조세심판원으로 파견 받는 것은 부적절하므로, 조세심판 청구자인 납세자의 권익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도록 조세심판원의 기능을 바로 잡을 것	<p>《시정처리결과》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인사혁신처의 인사교류지침에 따른 계획인사 및 별도 진출입 인사교류를 시행 중 - 조세심판의 특성(세법적 전문성 및 노하우 확보의 필요성)을 고려할 때 과세관청과의 인사교류가 일부 불가피한 측면*이 있음 <p>* 우수인력확보, 일선경험 공유 및 과세 업무 이해 증진 등</p> <p>《향후추진계획》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세무 전문성 및 노하우 확충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인사교류는 유지하되, - 과세관청 직원의 근무로 인한 납세자의 불필요한 오해 방지를 위해 심판부 운영을 합리화*하고, <p>* 예 : 원소속 기관에서 과세처분 조사를 담당하는 관련 심판사건의 조사에서 배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중장기적으로 과세관청과의 인사교류의 범위 및 규모를 합리화

2020년도 국정감사결과
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국무조정실	56. 조세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의 원만한 사후관리를 위해 과세관청의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, 심판원의 사건처리 지연이 지속되는 문제에 대한 원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선방안을 마련·보고 할 것	<p>《시정처리결과》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사후관리 협조) 국세청 정보시스템(https://txsi.hometax.go.kr)에 등록되는 법원판결을 심판원 내부데이터베이스로 연동하고, 심판원 사건 담당자가 이를 사건조사 등에 활용 - 심판결정 처리결과 보고대상을 합리화(인용, 재조사 사건 보고)하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기획재정부에 송부('21.1월) ○ (처리기간 개선) '20.9.8. 직제개정을 통해 국세·지방세 심판부를 각 1개씩 증설하여 운영 중 <p>《향후추진계획》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사후관리 협조) 심판결정 처리결과 보고 관련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을 지속 추진 ○ (처리기간 개선) 심판원 직제개정을 고려하여, '21년 상반기 중 실무인력(조사관, 사무관) 확충하고, 향후 지속적 인력증대를 위해 노력 - 그 외 유사·동일쟁점 사건 병합 심리 등을 통해 사건처리 및 운영 효율성을 제고

2020년도 국정감사결과
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국무조정실	57. 조세심판관의 출신이 기재부에 편중되어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조세심판관 자격요건과 인선 절차에 대해 종합적인 제도 개선책을 마련할 것	<p>《시정처리결과》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심판결정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조세심판관은 법령(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5조의2)에서 규정한 자격요건*을 갖춘 사람 중에서 엄격한 절차를 거쳐 임용 - 다만, 심판관의 전문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기재부 등 특정부처 또는 전문분야 경력의 심판관 일부 임용이 불가피한 측면 <p>* 예 : 국세사무에 4급 이상 공무원으로 3년 이상 또는 5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 / 판사·검사 또는 군법무관, 변호사·공인회계사·세무사 또는 관세사, 조교수 이상으로 10년 이상 재직</p> <p>《향후추진계획》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상임심판관 내부 총원(승진) 강화 등을 통해 임용자들의 다양성을 제고하고, - 그 외 심판부의 합리적 운영, 비상임심판관의 적절한 배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노력

공백

공백

2020년도 국정감사결과
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경제·인문 사회연구회	1. 한국직업능력개발원, 한국형사정책연구원, 한국환경정책·평가연구원 등 연구기관 명칭 변경과 관련 분야 연구범위 확대 및 연구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출연연법 개정 등을 지원할 것	<p>《시정·처리결과》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한국직업능력개발원,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현재 개정안이 정무위원회에서 의결되었으며, 한국환경정책·평가연구원은 추후 정무위원회 재검토 예정 * 한국형사정책연구원 → 한국법무·형사정책연구원 * 한국직업능력개발원 → 한국직업능력개발연구원 <p>《향후추진계획》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책연구기관의 역할과 역사 및 정체성이 기관 명칭에 반영될 수 있도록 법안 심사 단계를 적극 지원할 예정

2020년도 국정감사결과
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경제·인문 사회연구회	2. 국무조정실에서 실시한 채용감사 결과의 불공정 채용 사례를 참고하여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할 것	<p>《시정·처리결과》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채용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연구회 및 연구기관 ‘공동채용시스템’ 도입방안 마련 * 연구기관 인사부서장 회의(‘21.1.), 1차 설명회(‘21.2.) <p>《향후추진계획》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21년도에 인턴, 행정직 등을 대상으로 공동채용을 시범실시하고, 이후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 * 공동채용시스템 입찰공고(‘21.3.~4.), 2차 설명회(‘21.4.), 업체선정(‘21.5.), 시스템 시범도입 및 추진(‘21.6.) ○ 연구회 및 연구기관 직원 채용 관련 교육 강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연 2회 인사·채용 부서장 및 담당자 관련 교육 실시 예정 ○ 2021년도 연구기관 운영실태 점검 시 채용실태 점검하고,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 시 제도 개선 검토

2020년도 국정감사결과
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								
경제·인문 사회연구회	3. 신규 채용 시, 학사급만 적용되고 있는 지역인재 채용 가점을 석·박사급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부처 등과 협의하여 대안을 마련할 것	<p>《시정·처리결과》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학사 기준으로 비수도권 지역인재 채용가점을 부여 중 ○ 정규직의 경우에는 채용의무 인원보다 더 많은 지역인재를 채용 중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>신규채용 인원(A+B)</th> <th>지역인재 채용의무 예외인원(A)</th> <th>지역인재 채용의무 인원(B)</th> <th>지역인재 채용인원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225</td> <td>194</td> <td>31</td> <td>34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* '20.10월말, 정규직 기준</p> <p>《향후추진계획》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출연연의 경우에는 연구직이 대부분으로 관련법*에 의거 지역인재 채용의무 예외를 적용 받고 있음.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-top: 10px;"> <p><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> 제30조의2(이전공공기관등의 지역인재 채용) ④ 이전공공기관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시험에서 지역인재를 발표 1의 비율 이상으로 합격시키지 않을 수 있다 3.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직으로 직렬을 제한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</p> </div> <p>- 다만, 기관별 지역인재 채용 가점 부여 현황 파악 및 관련 부처 협의 등을 통해 석·박사급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겠음.</p>	신규채용 인원(A+B)	지역인재 채용의무 예외인원(A)	지역인재 채용의무 인원(B)	지역인재 채용인원	225	194	31	34
신규채용 인원(A+B)	지역인재 채용의무 예외인원(A)	지역인재 채용의무 인원(B)	지역인재 채용인원							
225	194	31	34							

2020년도 국정감사결과
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경제·인문 사회연구회	4. 국책연구기관의 정보보안 강화를 위해 정보보안 전담 인력 충원방안을 마련할 것	<p>《시정·처리결과》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매년 인력증원 심의 시 정보보안 인력 충원 노력 중 (20년 4명, 21년 4명) ○ 또한, 정보보안 담당자의 역량 제고를 위해 각 기관별 자체적으로 연 1회 이상 외부전문가 활용을 통한 교육 실시 중 <p>《향후추진계획》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매년 정부의 인력증원 심의 시 정보보안 인력 등 행정인력 별도심의를 정례화하여 관련 전문 인력이 최대한 증원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예정 - 또한, 연구회 차원에서 전체 소관기관 대상으로 정보보안 역량 제고를 위해 보다 전문성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정기적으로 교육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

2020년도 국정감사결과
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경제·인문 사회연구회	5. 연구회 NKIS 이용자 불편을 개선할 것	<p>《향후추진계획》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정보시스템 및 홍보 전문가 중심의 연구용역 실시를 통해 NKIS 시스템·서비스 개선, 홍보활동 강화를 위한 세부적 실천방안 마련 예정('21. 8월) ○ NKIS 시스템 및 서비스 개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수요자 중심의 이용 편의성, 정보 활용성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 · NKIS 내 통계서비스 : 통계 자료의 효과적 아카이빙 방안 (등록의무화 여부 등) · 자료 다운로드 시 로그인 정책 : 유지(맞춤형 개인화 서비스 측면) 혹은 폐지(이용 편의 측면) 여부에 대한 검토 · NKIS와 연구기관 API 연계 확대* : 발간물의 메타데이터 및 파일 등록 시, API 연계를 통해 수요자에게 보다 신속한 정보 서비스 제공 <p>* 현재 8개 기관, 5개 기관 추가 예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문가 관점의 시스템 완성도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 도출 - 정책 큐레이션 관점에서 주요 정책현안·이슈에 대한 연구동향, 핵심성과 등을 알기 쉽게 제공하기 위한 콘텐츠 제작

2020년도 국정감사결과

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경제·인문 사회연구회	6. 장애인 의무고용률 및 장애인 생산품 의무구매 비율을 준수할 것	<p>《시정·처리결과》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장애인 의무고용률 관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'20년 국정감사 후속조치 종합 대책 TF의 검토과제로 선정하여 현황 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 중 - 중증장애인 초과현원 제도* 도입으로 채용방식 유연화 *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 개정('20.12.) - 전년대비 장애인 고용 증가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margin: 10px 0;"> <thead> <tr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구분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고용인원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의무 고용인원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비율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미준수 기관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'19년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71.8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8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82.6%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5개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'20년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84.5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18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84.6%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3개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관장 경영목표 반영 : 장애인 의무고용 사항을 의무화하여 채용 의지와 관심을 유도 ○ 장애인 생산품 의무구매비율 관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년대비 장애인 생산품 구매율 증가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margin: 10px 0;"> <thead> <tr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구분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총 구매액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우선구매액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비율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미준수 기관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'19년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21,188백만원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,406백만원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.0%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4개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'20년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13,560백만원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3,158백만원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.8%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개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* 의무구매비율 : 1% 이상</p> <p>《향후추진계획》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장애인 의무고용률 관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연구기관 평가 강화 : 평가배점 상향 조정 및 평가방법 변경 등을 통한 우선고용 촉진 검토예정 - 장애인 시설개선, 지역대학 협의, 원격근무제 활용(스마트워크센터 활용 등), 관계기관 협의 등 추진 ○ 장애인 생산품 의무구매비율 관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관별 구매물품 실적 점검 및 우수제품 현황 공유 등 추진 - 지역별 지자체 등과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및 협력사업 발굴을 통해 우선구매 비율 준수토록 노력할 계획 	구분	고용인원	의무 고용인원	비율	미준수 기관	'19년	171.8	208	82.6%	15개	'20년	184.5	218	84.6%	13개	구분	총 구매액	우선구매액	비율	미준수 기관	'19년	121,188백만원	2,406백만원	2.0%	4개	'20년	113,560백만원	3,158백만원	2.8%	2개
구분	고용인원	의무 고용인원	비율	미준수 기관																												
'19년	171.8	208	82.6%	15개																												
'20년	184.5	218	84.6%	13개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분	총 구매액	우선구매액	비율	미준수 기관																												
'19년	121,188백만원	2,406백만원	2.0%	4개																												
'20년	113,560백만원	3,158백만원	2.8%	2개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2020년도 국정감사결과
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경제·인문 사회연구회	7. 학·석사급 연구직이 박사 학위를 취득해도 박사급 연구직으로의 승진이 차단되는 투트랙 제도를 개선할 것	<p>《시정·처리결과》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‘20년 국정감사 후속조치 종합대책 TF를 구성, 투트랙 제도(학·석사급 연구직 승진 차별)개선을 검토과제로 선정하여 연구기관별 현황 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 중 * 13개 기관에서 투트랙 제도 운영 중 (KDI, 노동 등) <p>《향후추진계획》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정감사 후속조치 종합대책 TF, 연구기관 및 관련부처 협의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21년 중 모색할 예정

2020년도 국정감사결과
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경제·인문 사회연구회	8. 계약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수의계약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	<p>《시정·처리결과》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‘20년 국정감사 후속조치 종합 대책 TF를 구성하여, 계약관리 강화(수의계약 등) 방안 마련 - 수의계약 시 업체선정 과정에 대한 기준 마련, 특정 업체와 반복적인 수의계약 체결 방지 등 <p>《향후추진계획》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국가계약법」 및 동법시행령 준수토록 관리·감독 및 계약 담당자 교육을 강화할 예정 - 기관별 계약 업무를 추진하는 계약담당관을 지정하고, 담당관을 대상으로 계약이론 및 실무에 관한 지속적인 교육을 추진할 예정

2020년도 국정감사결과
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경제·인문 사회연구회	9. 초과근무수당 문제와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문제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	<p>《시정·처리결과》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관별 노사합의를 거쳐 예산 편성 시 총인건비인상률 준수 범위 내에서 초과근무수당 신설 하도록 권고('20.11.) ○ 주52시간제 도입을 위한 시스템 구축('20.12)으로 출연연의 연장근로 수당 미지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* 주52시간제 시스템 도입 '20년 말 기준 21개 기관 운영 중 <p>《향후추진계획》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주52시간제 미도입기관이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주52시간제를 도입·시행하도록 노력 ○ 관련부처-연구기관 등과 협의를 통해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속 노력

2020년도 국정감사결과
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경제·인문 사회연구회	10. 국책연구기관의 이직률이 높는데, 이직방지 및 우수 연구인력 확보를 위해 정년연장, 처우 개선 등 사기진작 방안을 마련할 것	<p>《시정·처리결과》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정년, 공제회 등 과학기술계 연구기관 대비 열악한 근무조건에 대한 개선 노력 중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 추진 * '20년 5개 기관(국토, 건축, 해양 에너지 정보) 가입완료 '21년 4개 기관(산업, 보건, 육아, 농촌) 재심의 중 <p>《향후추진계획》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 추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과기공제회법 또는 과기공제회 정관 개정 등을 통해 연구회 및 연구기관이 가입대상이 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, 과기공제회 등과 지속 협의 예정 ○ 정년정상화(고용연장) 추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과학기술계 연구기관 수준의 고용연장(만 60세→만 61세) 및 우수직원 65세 고용연장(정원 10% 이내)에 대해 정부 부처와 지속 협의 예정 ○ 연구용역을 통해 출연연의 적정 임금을 산출하여 기존 직원의 사기진작과 우수직원을 확보하도록 개선방안 마련할 예정(~'22.3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「연구수월성 제고를 위한 직무기반 임금체계 연구」('21.4~'22.3)

2020년도 국정감사결과
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경제·인문 사회연구회	11. 저임금 기관의 경우 직급체계 개선 등을 통한 처우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	<p>《향후추진계획》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임금편차 원인 및 실태를 다각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연구용역을 통해 출연연의 적정 임금 산출 및 격차 해소방안 마련 예정 (~'21) - 「연구수월성 제고를 위한 직무 기반 임금체계 연구」('21.4~'22.3)

2020년도 국정감사결과
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경제·인문 사회연구회	12. 정규직 전환 이후 비정규직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	<p>《시정·처리결과》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비정규직 사전심사제를 실시하여 정규직 전환 이후에도 비정규직을 무분별하게 운영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, ○ 정부의 3차 정규직 전환과 관련하여 파견직 전산유지보수인력 2명에 대해 전환 심의 중(부처 심의) <p>《향후추진계획》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‘22년도 사업계획 심의 시 가이드라인* 등에 따라 정규직 전환 사업의 비정규직 증원 제한, 상시·지속업무에 대해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토록 노력할 계획 * 고용노동부 「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」(20.11.) ○ 비정규직의 추가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는 관련부처와 지속적으로 논의 예정

2020년도 국정감사결과
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경제·인문 사회연구회	13. 세종국책연구단지 시설, 안전문제 등 관리 부실 사항을 개선할 것	<p>《시정·처리결과》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세종국책연구단지 관리주체인 한국자산관리공사와(캠코)와 통합운영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련 사항 개선 중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한국자산관리공사, 입주기관, 노동조합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중 - 시설유지관리, 보안 등 20여개 개선요구, '21.4월 현재 7개 개선 완료 등 <p>* 통합운영협의회 개최 : 제1회('20.12.8), 제2회('21.3.23)</p> <p>《향후추진계획》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개선방안 협의 및 모니터링 추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연구단지 시설 개선사항을 지속 발굴 및 협의하고 모니터링 추진 예정 <p>*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, 옥외 조형물 철거, 안전진단 참여, 화재 및 소방 훈련 실시, 주차장 해소방안 마련, 공용시설 관리 철저, 코로나 방역 등</p>

2020년도 국정감사결과
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경제·인문 사회연구회	14. 부적정 대외활동에 대한 기관별로 상이한 제재 기준을 개선하고 가중 처벌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할 것	<p>《시정·처리결과》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출연연 「운영 표준지침」에 반영 완료 - 연구기관 직원 대외활동 관리 및 제재기준 개선('20.8.) : 대외활동에 대한 자체관리를 강화하고 위반정도(횟수, 금액 등)에 따른 제재조치 차등화 ○ 기관별 미신고 대외활동 자체 점검 실시('20.12.~'21.1.) : 점검 결과 및 지적사항 등을 반영하여 제도개선방안 마련 예정 <p>《향후추진계획》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'21년도 연구기관 운영실태 점검 시 대외활동 이행현황 점검 실시 예정 ('21년 하반기) ○ 대외활동에 대한 신고절차, 내용 등에 대한 사전 예방 교육 강화 추진

2020년도 국정감사결과
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경제·인문 사회연구회	15. 과학기술계 연구기관에 적용되고 있는 자체청사 보유기관의 재산세 면제 혜택을 경제인문사회계 연구기관에도 적용되도록 관련법 개정을 지원할 것	<p>《시정·처리결과》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자체청사 기관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다각적 지원 노력으로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입법 발의(홍성국 의원, '20.10.) - 지방세 면제대상에 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직접적 포함하도록 제45조 제3항 신설 <p>《향후추진계획》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상정된 개정안이 입법 완료될 수 있도록 국회, 관련부처 등과 협력하는 등 지원할 계획

2020년도 국정감사결과
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경제·인문 사회연구회	16. 채용부정행위, 사적 이해 관계자 신고, 연구보고서 표절 및 중복게재 등 연구 부정행위, 미신고 대외활동, 성희롱 사건, 가족수당 부정수급 등 국책연구기관의 도덕성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	<p>《시정·처리결과》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‘20년 국정감사 후속조치 종합 대책 TF를 구성하여 개선방안 마련 * 4개 분야(연구관리, 인사·복무관리, 예·결 산관리, 법·제도관리), 총 28개 과제 선정 - 각 기관별 자체점검, 연구기관 의견수렴, 기관장(경영협의회) 논의 등을 거쳐 마련된 개선 방안을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고 완료(‘21.2.) * 공동채용제도 도입, 담당자 사전확인 절차 마련, 관련 교육 강화, 21년도 연구기관 운영실태 점검 및 점검결 과에 따른 제도개선 등

2020년도 국정감사결과
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경제·인문 사회연구회	17.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지역 화폐 연구 논란 관련, 연구기관과 연구자를 보호할 수 있는 연구 독립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	<p>《시정·처리결과》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‘20년 국정감사 후속조치 종합 대책 TF를 구성, 연구독립성 확보방안을 검토과제로 선정하여 방안 마련 중 <p>《향후추진계획》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연구회는 논쟁적 사안에 대해 연구자들의 연구 및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고, 내외부 전문가들이 연구 내용과 방법론에 대해 개방적인 토론을 통해 상반된 견해를 망리해 융·복합적 시각의 연구결과를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 - 향후 국정감사 후속조치 종합 대책 TF 등을 통해 이러한 방향 등을 포함한 대안을 도출하고, 연구의 독립성·자율성과 국책 연구기관으로서의 책임성이 동시에 충족될 수 있는 연구독립성 확보방안을 모색할 예정

2020년도 국정감사결과
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경제·인문 사회연구회	18. 과도한 민간수탁사업 수행 방지를 위한 기준을 마련할 것	<p>《시정·처리결과》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연구기관이 과도한 민간수탁사업 수행을 방지하도록 민간수탁사업 수행 기준을 마련하여 「'21년도 예산편성집행지침」 개정 시 반영 완료('21.3.) - 민간수탁 수행 시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행해야 하며, 공공적·가치중립적·정치적 중립 등을 지키면서 과제를 수행하되, 기관별 내부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

2020년도 국정감사결과
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경제·인문 사회연구회	19. 기본연구 수행 시, 특정 연구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관리할 것	<p>《향후추진계획》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연구기관은 우수한 연구실적을 내기 위한 과정에서 특정 연구자가 다수의 (기본)연구를 수행할 수 있으며, - 다만, 특정인력의 과도한 과제 참여로 인해 신규인력을 포함한 타 인력의 연구참여를 저해함으로써 기관 전체의 연구능력 향상을 저해하지 않도록 관리할 예정

2020년도 국정감사결과
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경제·인문 사회연구회	20. 연구기관 간 연구과제가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하고, 다분야 학제적 협동연구과제 발굴을 제도화하는 것을 검토할 것	<p>《시정·처리결과》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‘21년도 사업계획 심의 시 카피 킬러 등을 활용하여 연구기관간 연구과제 중복성 점검·조정 완료(’20.5, ’20.12) ○ NRC 정책연구플랫폼 등을 활용, 메가프로젝트 협동연구 기획을 정례화 하여 학제적 협동연구 과제 발굴 제도화 <p>* ‘20년 핵심 8개 분야 10개 과제 추진</p> <p>《향후추진계획》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연구과제DB 구축, 표준양식 도입 등 유사·중복 사업 검증체계 고도화 검토 예정(~’21.12) ○ 「협동연구사업 운영규정」 개정시 다분야 학제적 융·복합 협동연구 발굴을 제도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(~’21.12) ○ ‘21년 메가프로젝트 협동연구 기획중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‘21년 메가프로젝트 협동연구 주요 주제(안) : ① 인구정책연구, ② 탄소중립정책연구 등 - 연중 NRC 정책연구플랫폼, 정부부처, 국회 등 의견 취합 예정

2020년도 국정감사결과
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경제·인문 사회연구회	21. 각 기관에서 진행 중인 위험물질·유해화학물질 관련 연구를 통합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협동 연구를 기획할 것	<p>《시정·처리결과》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‘21년 실행사업계획 확정(3월 정기 이사회(’21.3.))에 따라 개별 연구 기관의 위험물질·유해화학물질 관련 연구사업 계획을 취합, 검토 중 <p>《향후추진계획》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‘21년 협동연구 주요 주제(안)에 ‘위험물질·유해화학물질정책연구’를 포함, 위험물관리정책연구를 연구회 기획 협동연구로 추진할 예정 - 개별 연구기관의 위험물질·유해 화학물질 관련 연구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, 중복성이 발생하지 않는 차원에서 통합적 협동연구 기획 예정

2020년도 국정감사결과
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경제·인문 사회연구회	22. 연구회 NKIS 홍보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	<p>《향후추진계획》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정보시스템 및 홍보 전문가 중심의 연구용역 실시를 통해 NKIS 시스템·서비스 개선, 홍보활동 강화를 위한 세부적 실천방안 마련 예정('21.8월) ○ NKIS 홍보활동 강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다양한 국민의 이용·참여 확대를 위한 효율적 홍보방안 마련 · 대학생 등 일반국민의 직접 참여를 위한 NKIS 서포터즈 · 연구성과 활용성 제고 측면에서의 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· 정책고객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 확대 등 - 정부부처 등 활용방안 마련 · 국무조정실 등 정부부처 내부 업무시스템 內 NKIS 검색 환경 마련 등 주요 정책입안자들의 활용성 강화

2020년도 국정감사결과
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경제·인문 사회연구회	23. 국책연구기관 스마트워크센터(여의도, 강남)의 복무관리를 강화할 것	<p>《시정·처리결과》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책연구기관 스마트워크센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스마트워크센터 이용 현황을 각 연구기관에 정기적으로 통보하여 기관별 복무관리와 연계 강화 ○ 행정안전부 스마트워크센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관리자 미등록 기관의 경우, 등록하여 관리토록 조치완료 <p>《향후추진계획》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책연구기관 스마트워크센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자적인 복무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기관별 인사담당자가 직접 관리가 가능하도록 '22년 예산 요구 등 지속 노력 ○ 행정안전부 스마트워크센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국가 공무원 원격근무기준, 행정안전부 스마트워크센터 이용지침 등을 참조하여 기관별 복무관리 지침 제정 검토('21년 중)

2020년도 국정감사결과
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경제·인문 사회연구회	24. 출연연 공통 교육프로그램 마련 시 연구기관의 자체 프로그램과 중복되지 않도록 할 것	<p>《시정·처리결과》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조치완료) 국책연구기관 교육과정은 기관별 수요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연구회와 모든 연구기관이 공동 기획하며 ‘교육·기획운영위원회’ 운영을 통해 교육과정 중복여부 등 검토 후 최종(안)을 도출하여 운영 중 * 연구회 및 연구기관 부기관장, 교육 유관 부서장 등으로 구성 <p><2021년 교육과정 최종(안) 수립 절차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연구기관별 교육운영 현황 조사 ('20.8.26.) ② 교육기획·운영위원회 분과별 워크숍 ('20.11.24.-12.3.) ③ 교육기획·운영위원회 전체회의('20.12.9.) ④ 교육기획·운영위원회 분과위원장 회의 ('20.12.21.) ⑤ 교육기획·운영위원회 전체회의 ('21.1.25.) ⑥ 2021년 국책연구기관 교육과정 운영계획 확정('21.1.25.)

2020년도 국정감사결과
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경제·인문 사회연구회	25. 특정 연구자들의 경우 소속 출연연의 기본연구 수행 과제수는 매우 낮은 반면, 대외활동으로 과도하게 수입을 창출하고 있으므로 이를 방지할 방안을 마련할 것	<p>《향후추진계획》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'21년 연구기관 운영실태 점검 시, 대외활동 실태 등을 점검하고,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 시 제도 개선 검토

2020년도 국정감사결과
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경제·인문 사회연구회	26. KDI 등이 공적마스크 판매 기간에 연구개발 적립금으로 마스크를 대량 구입하였는데 정부의 시책에 반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할 것	<p>《시정·처리결과》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'21년도 예산편성·집행세부지침」 개정시 예산 부정 지급여부를 자체점검하는 체크리스트 마련('21.3.) - 인사, 급여, 사업책임·관리자 등 예산집행담당자가 예산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자체 점검하고 자체감사 시 확인 <p>《향후추진계획》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향후에도 정부 시책에 반하는 예산사용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음 - 현재 가족수당, 과제참여 대가지급, 협동연구사업 예산집행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였으며, 향후 체크리스트를 확대 ○ 예산 부적정 사용기관에 대해서는 '22년 예산·인력 심의시 반영 예정(~'21.8.) ○ 출연연의 연구개발적립금 사용시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될 수 있도록 면밀한 심사·관리 실시 하겠음

2020년도 국정감사결과
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국토연구원	27. 부동산 가격 급상승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 대처방안 및 세제 틀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므로,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	<p>《시정·처리결과》 : 처리완료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부동산 가격과 관련된 세제, 금융의 핵심 이슈에 대해 세미나(5회*)를 개최(경사연 이사장 및 원장 주재)하였으며, 해외 조세, 금융, 가격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, 관련 보고서(국토이슈리포트** 8종) 등을 발간했음 * '20.8.4.(1차), '20.8.11.(2차), '20.12.14(3차), '21.1.14.(4차), '21.2.9.(5차) ** 호주 주택시장 동향과 정책 변화('21.3.23.), 캐나다 브리티시 콜럼비아주와 밴쿠버시 주택정책('21.3.19.), 영국 주택시장 동향과 런던의 주택정책: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실제 부담가능한 주택공급('21.3.5.), 프랑스 파리의 주택정책 변화와 시사점: 임대차 시장 안정과 모두를 위한 주택공급('21.2.10.), 글로벌 주택가격 상승기의 금리정책과 주택금융시장 체질개선 방향('21.2.3.), 북유럽 3개국의 부동산 금융 정책과 시사점('20.6.22.), 프랑스·싱가포르의 부동산 조세정책과 시사점('20.6.15.), 영국의 부동산 조세정책과 시사점('20.6.8.) ○ 또한 부동산 가격 안정과 관련하여 “해외 주택금융정책 비교연구”, “주택 시장 순환구조와 자산격차에 대한 연구” 등 관련과제를 현재 다수 추진 중에 있으며, 주요 국가 및 도시의 주택 가격과 우리나라 비교 연구 등 부동산시장 가격안정과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연구를 적극적으로 수행 중에 있음

2020년도 국정감사결과
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국토연구원	28. 직원 관련 수사 중인 형사사건에 대하여 구속 수사가 안 되고 있으므로, 수개월간 휴가를 사용하고 월급을 받은 직원을 고발하거나 사건이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할 것	<p>《시정·처리결과》 : 처리완료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건 관할기관인 대전지방검찰청에 국토연구원 기관 명의의 「수사촉구 요청」 의뢰 공문 발송('20.11.4.) - 대전지방검찰청에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조속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기관 차원의 공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치함 ※ 현재 검찰에서 구속기소 ('20년 12월 말)하여 수감상태에서 대전지방법원에서 1심 재판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

2020년도 국정감사결과
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에너지경제 연구원	29. 과도한 행사 개최경비 집행 관행을 시정할 것	<p>《시정·처리결과》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2020년도 연구성과 발표회 (탄소중립 실현으로 가는 길)」(’21.04.01.) 개최 장소 연구원 대강당 활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연구원 시설 활용으로 개최경비 절감효과 - 코로나 방역조치 대응 및 연구성과의 효과적인 대국민 확산을 위해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고, 유튜브 스트리밍 ○ 「2021년도 연구회 및 연구기관 예산편성·집행 세부지침」 개정(안) 반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제298차 정기이사회(’21.03.25.) - (배경) 기획재정부 ‘2021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 작성 세부지침’을 준용하여 세미나 등 개최 시 예산 낭비성 회의실 임차 방지 추진 - (내용) ‘회의실 임차는 정부·공공기관(예: 학교시설, 구민회관, 공공문화센터 등) 보유 시설을 최대한 우선 활용하고, 호화로운 호텔임차 등 불필요한 지출을 최소화하여 예산을 편성·집행한다.’ <p>《향후추진계획》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’21년도 주요 세미나 개최 시 개최장소를 고급 호텔을 지양하고, 연구원(또는 공공기관) 보유 회의장·컨벤션 장을 우선 활용 예정

2020년도 국정감사결과
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<p>정보통신 정책연구원</p>	<p>30. 임시 사택 운영 종료에 대비하여 장기적인 정주 여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</p>	<p>《시정·처리결과》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임시사택 운영 종료에 따른 정주 여건 개선방안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임시사택 운영 종료를 직원에게 사전 공지하고, 단계적으로 축소 - 직장 어린이집 증축 지원 등 이주직원 정주여건 개선 <p>《향후추진계획》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노사협력TF 구축·운영 ○ 지역 초중고 학생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 교육 환경 개선 ○ 혁신도시발전위원회 실무자협의회에 정주여건 관련 안건 제출

2020년도 국정감사결과
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통일연구원	31. 통일의식조사 설문 문항 ‘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(헌법 제4조)은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하여 포함하고, ‘우리나라 주변국 중 어느 나라가 좋은가?’ 문항에 대해 질문의도와 구체성을 고려하여 개선할 것	<p>《시정처리결과》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‘21.4월 하순에 예정되어 있는 연례 KINU 통일의식조사에서 헌법 4조 관련 문항을 다시 조사하도록 기획 중이며, 주변국 선호도 문항은 최근 한반도 정세를 고려할 때 필수적인 정보라고 판단되어 계속 조사할 예정임. <p>《향후추진계획》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‘21.4.25~5.20 KINU 통일의식조사 실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‘21.6월 초반 조사결과 중간발표 - 최종보고서는 ‘21.10월 말까지 완성하여 연말에 출판할 예정

2020년도 국정감사결과
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한국개발 연구원	32. 국토교통부 의뢰 시, 장래 철도환경 수요를 반영하여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-C노선 인덕원 정차모델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할 것	<p>《시정·처리결과》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정부는 “수도권 광역급행철도 C노선 기본계획”(국토교통부, '20.10) 수립 후, 동 사업을 민간투자법 절차에 따라 정부고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“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시설사업기본계획 변경고시('21.1.29.)” 중임. <p>《향후 추진계획》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향후 민간투자법 절차에 따라 주무관청인 국토교통부로부터 (인덕원 정차 포함된) 사업계획의 검토가 의뢰될 경우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면밀하게 조사에 임하겠음.

2020년도 국정감사결과
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한국교육 과정평가원	33. 수능 원서접수부터 결제 방식까지 디지털화가 가능하도록 검토할 것	<p>《시정·처리결과》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응시수수료 수납방식 다양화를 위하여 기존 현금 방식에 가상계좌 입금 방식을 추가하여 현금소지의 불편함을 최소화함.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수능 응시수수료 납부 수단 다양화를 위한 TF 추진(20.2월~) - 재학생을 대상으로 가상계좌를 이용한 응시수수료 납부를 실시하였으며, 전국 17개 시·도, 1,338개 고등학교에서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응시수수료 납부(20.9월) - 올해는 가상계좌 확대 시행을 위한 시도교육청 논의 진행 중(21.3월~) ○ '21년부터 수능 응시원서 작성 온라인 홈페이지 시범 운영 예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홈페이지 개발 및 운영 방향 집중검토(21.3월~5월) - 시범운영 1~2개 시도 선정(21.5월) - 응시원서 작성 홈페이지 개발(21.7월~) - 홈페이지 운영(21.8월~9월) <p>《향후추진계획》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응시수수료 납부 편의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결제 방식 지속 확대·적용 예정 ○ 올해 응시원서 작성 홈페이지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점진적 확대 시행 예정

2020년도 국정감사결과
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한국교육 과정평가원	34. 수능 응시수수료 면제자에 대한 홍보 강화와 절차를 개선할 것	<p>《시정처리결과》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'19년 7월부터 응시수수료 면제 관련 확인 절차 개선 내용을 각종 자료로 안내하고, 보도자료 발표로 홍보 강화 - 2020학년도 수능 원서접수부터 면제자 대상이 되는 자격 변동내역이 있는 재학생의 경우 반드시 수험생 본인이 해당 절차를 거쳐서 응시수수료 면제를 받을 수 있음을 안내 ※ 관할 보장기관(행정관청)에 사회보장급여 신청 시 초·중·고 학생 교육비 지원 항목도 반드시 신청하여야 하며, 추후 급여 심사 결과를 통지 받으면 학교 행정 담당자에게 'NEIS' 전산망에 사회보장 급여 내역의 반영 여부 확인 - 해당 내용을 시행세부계획 및 실시요강 자료, 신문 공고 등을 통하여 수험생들에게 원서 접수 전에 고지 - 원서 접수를 담당하고 있는 시도교육청 및 학교담당자에게도 해당 절차 안내 및 면제 대상자가 면제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안내 강화 <p>《향후추진계획》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원서접수 담당자 교육 강화 및 안내 자료 확대 등 응시수수료 면제 누락이 되지 않도록 안내 및 홍보 지속 추진

2020년도 국정감사결과
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<p>한국보건 사회연구원</p>	<p>35. 육아휴직의 권리로서 안정적 보장과 소득 대체율 수준 현실화를 위한 ‘공적 부모보험’ 도입 방안에 대한 연구 추진을 검토할 것</p>	<p>《향후추진계획》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출산전후 휴가 및 육아 지원 제도의 새로운 체계 전환의 필요성 검토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맞춰 2022년 본 원의 일반과제인 ‘저출산고령사회 센터 운영’의 세부과제로 구성하여 추진할 예정임.

2020년도 국정감사결과
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<p>한국보건 사회연구원</p>	<p>36. 보건의료 인력확충을 위한 의(醫)-한(韓) 통합 연구추진을 검토할 것</p>	<p>《시정·처리결과》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‘의-한의 이원화체계 개선을 위한 전략수립 연구(2018)’ 및 ‘보건의료인력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추계 연구(2020)’를 기 수행함. <p>《향후추진계획》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의료인력 통합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교육과정 개선을 비롯한 질 제고 방안과 적정 수급 추계 전제 필요함. ○ 특히 의-한의 인력의 경우 2019년 의-한-정 협의체 사례에서 확인되듯, ‘지역간 업무영역 및 면허범위’쟁점에 대한 의미있는 진전이 통합 논의에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 ○ 의(醫)-한(韓) 통합 연구는, 기 수행 연구를 통해 지역별 인력 질 제고와 수급추계를 제시한바 있으며,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확보를 위해 추가 연구는 면허·업무범위 쟁점에 대한 당사자(의료계 및 한의계) 입장진전이 이루어진 후에 추진할 예정임.

2020년도 국정감사결과
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한국조세 재정연구원	37. 「지역화폐 도입이 지역 경제에 미친 영향」 보고서 관련해서 제기된 문제점을 검토하여 보고서 내용을 보완하고, 연구자 보호 및 연구 자율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	<p>《시정·처리결과》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지역화폐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」 보고서와 관련해서 원내외에서 제기된 문제점 및 의견을 검토하여 최종보고서에 반영하였음('20.12. 출판 완료) <p>《향후추진계획》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정출연법에 규정된 연구의 독립성 준수를 통해 연구자 보호 및 연구 자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연구환경을 만들어 가겠음

2020년도 국정감사결과
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<p>한국해양 수산개발원</p>	<p>38.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상 방출계획에 대응하여 수산업 보호를 위한 연구를 검토할 것</p>	<p>《시정·처리결과》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'21년 신규 협동연구과제 '원전 오염수 대응전략 수립 연구' 선정 완료 - (주관) 한국해양수산개발원 (참여) 한국법제연구원, 국립 수산과학원, 한국해양과학기술원, 해양환경공단 <p>《향후추진계획》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속적인 원전 오염수 관련 연구수행을 통해 수산업 보호 정책지원

2020년도 국정감사결과
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한국형사 정책연구원	39. 수사심의위원회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할 것	《시정·처리결과》 ○ 2021년도 연구과제인 ‘형사사법에 있어서 시민참여제도에 관한 평가연구’ 수행에 수사심의위원회 제도 개선에 관한 내용을 포함 하여 진행 중에 있음

2020년도 국정감사결과
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한국형사 정책연구원	40. 채용 과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채용규칙을 개정 할 것	《시정·처리결과》 ○ 채용규칙을 개정함('21.2.9.)